

대통령실 '재검토' 제안에... 이복현, 거래 금지→전향적 전환

(금융감독원장)

비트코인 현물ETF 재개되나

금감원장 "美 SEC위원장과 협의 가상자산 이슈 등 눈높이 맞춰야 상반기 중 뉴욕 방문 韓시장 설명" 1단계 법 승인 이후 연내 기대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금융당국이 현물ETF에 대해 눈높이를 맞추길 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현물ETF 승인 이후 대통령실에서 재검토 의사를 피력한 것이 금융당국의 기조를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등과 관련해 거래 컨슬러 미국 중

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과 협의 하겠다"며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ETF 등 눈높이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이달 중 가려 했으나 상반기 중에라도 뉴욕을 방문해 한국시장의 노력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

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 SE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상장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권사

들은 상품 출시 공지를 띄웠지만, 금융당국의 거래불가 조치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금지됐다.

금융당국 입장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ETF를 국내 금융사가 중개하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도자료를 두 차례 연속 배포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던 금융당국이 전향적으로 선회한 원인으로 대통령실이 지목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고, 특정한 상태"라며 "투자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요인이 안되면서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거래 불가 방침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제안한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 육성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꾼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 금감원장이 빠르면 오는 5월 거래 컨슬러 SEC 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이어 홍콩 역시 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곧 승인할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도 오는 7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승인 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발언 이후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현물 ETF에 대한 검토를 다시 들어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총선과 1단계 법 이후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기업 합병때 이유·진행시점 등 시장에 공시해야"

금융위, M&A 정합성 제고방안 외평기관, 합병가액 산정 참여 못해 품질관리규정 마련, 평가에 포함해야



"기업의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6일 인수합병(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

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합병의이유와 합병 상대방 선정이유, 합병 진행시점 등 주요 의사 결정사유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경우 외부평가는 의무화돼 있지만,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상태다.

앞으로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참여한 기관은 외부평가기관을 할 수 없다. 외부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

병가액에 적정성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해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외부평가기관은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의견서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 간 합병시 외부평가기관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평가기관 선임 사실이 합병결정보다 먼저 공시될 경우,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공시 이후 공시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합병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3분기 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내년 의대정원 2000명'서 계속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 의대증원 단체행동에 "참여" 응답자 88.2%

이어 "정부가 2020년 9·4 의정 합의의 위반하고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라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대증원에 따른 단체행동에 88.2%의 응답자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포항시의회

포항시민의 곁에는 언제나 포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소통과 참여의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council.pohang.go.kr

pohangcitycouncil